

## ■ ( 언론 동향 ) 2021.11.18. “한국농업신문” 보도

### ○ 요소비료 수급불안 올라, 농가 불안 가중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업체 창고 비고, 공장 멈춰
- 농협, 비료 농협 계통 단가 조정 분기별로 조정 논의

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한 요소수 부족 문제가 농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 가운데 1년에 한 번 진행되던 비료 계통 단가 조정이 내년부터 분기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료업계에선 계통 단가 조정과 관련해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는 1년에 한 번 12월경 진행되는 조정을 통해 한해 비료 납품 가격이 정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급격한 변화에 업체들이 대응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을 납품하게 돼 적자 폭이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가 조정이 분기별로 이뤄질 경우 원자재 가격을 고려한 납품 가격이 분기별로 형성되기 때문에 업체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생산업체 공급중단 사태 방지와 비료 수급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몇몇 비료 생산업체 원자재 창고가 비어지고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등 비료 수급에 차질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소수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요소와 관련한 농업 현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중국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요소가 없어 구매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부지기수였으며, 일부는 요소비료를 구매하기 위해 농가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현재도 국제 원자재 가격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생산업체는 수급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사전에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요소수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뚜렷하고 명확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이번 분기별 단가 조정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분기별로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을 고려해 가격이 책정되면 가격 변동이 커 농가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쌀전업농연합회 관계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 등의 문제로 국내 비료업계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그로인해 농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정민 기자 >

## ■ ( 언론 동향 ) 2021.11.19. "농민신문" 보도

### ○ [취재수첩] 비료 없는 세상

비료 없는 세상을 상상해본다. 농작물의 생육기에 비료가 투입되지 않으니 작황이 눈에 띄게 부진해진다. 쌀과 마늘·양파 등 채소류의 가격이 급등한다. 사료작물 가격도 크게 올라 육류 가격이 치솟는다. 결국 농산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며 식량안보가 흔들리게 된다. 상상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요소 수급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 눈앞에 닥칠 현실이다.

요소비료는 영농의 필수재다. 특정 영양성분을 입자 형태로 묶어 농작물의 생장을 돕는다. 하지만 요소비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는 100% 수입에 의존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은 단 한곳도 없다. 국내의 마지막 요소 생산공장이 2011년 문을 닫았다. 경제 논리 때문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 가격이 국내산 요소보다 크게 낮아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요소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산 수입이 막히면 요소비료의 원활한 수급이 힘든 구조다. 중국이 지난달 중순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국내 산업계가 대혼란에 빠진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동계작물 재배에 필요한 만큼의 요소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내년 3월 영농철에 필요한 물량까지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이 지속돼 국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상상이 끔찍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다 낭패를 본 사례는 다른 산업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소부장'으로 일컬어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대표적이다. 일본이 2019년 소부장 분야의 수출을 규제하자,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진 바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3년간 소부장 분야에 연구개발비로 9241억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가장 문제가 됐던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일의존도는 43.9%에서 13%로, 감광액(포토레지스트)은 91.9%에서 85.2%로 낮아졌다.

요소비료에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에도 최소한의 요소 생산기반이 유지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요소 대란'을 방지해 식량안보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개별 기업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나서고, 요소 생산에 뛰어드는 업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식량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요소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점이 생긴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식량안보는 말짱 도루묵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될 분야다. 비료 없는 세상이 현실이 돼서는 안된다.

<김서진 (산업부 기자)>